



박근혜의 “노동 개혁”은 청년이 아니라 재벌들을 위한 것

양질의 국가부문 일자리 대폭 확충하라

(공무원, 교사, 공기업 노동자, 공공병원 노동자, 공공보육 교사 등등)

9월 1일 박근혜는 “노동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들의 요구”라며 노동계가 “청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노동개혁”(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임금 피크제(일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제도)를 도입해 고령 노동자 임금을 깎고,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그동안 재계가 요구해 오던 노골적인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이다. 박근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런 공격의 빌미로 사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7월 27일 민·관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 이에 대한 화답으로 삼성, 현대, SK, 롯데 등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청년 고용 종합대책은 실업과 저질 일자리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전혀 진정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첫째, 정부가 만들겠다는 일자리 대부분이 저질 일자리이고 대부분 직접 고용이 아닌 인턴이나 직무교육이다. 일부 기업은 기존 채용 인원까지 포함시켜, 숫자를 뺄기하기도 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이라도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된다(20만 개 중 7만 5천 개). 나



머지는 인턴,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장차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다. 이는 기업이 험값에 청년·학생을 맘껏 착취할 수 있게 해 주는 정책들이다. 게다가 신규 일자리에는 시간제 일자리, 기존 일자리 결원시 대체인력 등도 포함돼 있다.

둘째, 청년들의 고통을 명분으로 기존 노동자 임금 삭감(임금피크제)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중 절반 이상(3만 8천 개)을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반드시 늘려야 하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인건비를 줄이려고 비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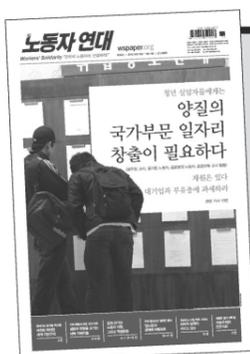
직을 늘려 온 기업주들이 과연 임금피크제로 줄인 지출을 온전히 청년 고용에 쓸까? 정부는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은 삭감하고 저질 일자리는 늘려, 같은 값에 두 명을 부려먹고도 남는 일석이조 기회를 기업주에게 주려 한다.

셋째,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서비스 산업 민영화 등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온갖 정책들을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소개한다. 정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서비스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분야 경제 활성화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이 법안들은 공공서비스 규제 대폭 완화와 의료 민영화 조처를 담고 있

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긴커녕 더 많은 대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일 뿐이다.

넷째, 정부는 청년 실업이 인력 수급의 “미스 매치”(부조화) 때문이라며 대학을 기업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하려 한다. “기업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기준으로 평가를 강화해 하위권 대학을 퇴출시키고, 산업 수요와 직결되지 않는 학과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처는 ‘돈벌이’가 별로 안 되는 학문은 쓸모없는 학문으로 취급돼 고사시키고, 학생들로부터는 다양한 학문을 배울 기회를 박탈할 것이다.

▶ 뒷면으로 이어짐



대학생도 함께 읽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대표전화 02-777-2792,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기사 짚어가는 중국발 먹구름 여전히 취약한 세계 자본주의
지리 폭발과 상호 포격 이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남북 지배자들
경제 위기와 노동자 저항, 그리고 학생운동
국제 엠네스티 결의안 발표 ‘성노동’과 성매매 비범죄화
치프라스 사임 이후 그리스 좌파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5백 일 자본주의와 안전사회

▶ 앞면에서 이어짐

청년들이 실업과 저질 일자리로 고통받는 것은 정부와 기업주들의 책임이다. 기업주들은 이윤을 위해 기존 노동자, 청년 가릴 것 없이 외주화,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아 왔다. 이들이 고통받는 동안 기업주들은 천문학적 부를 쌓아올렸다. 수백조 원에 이르는 기업 사내유보금과 가파르게 증가하는 기업저축 규모가 이를 보여 준다. 정부는 이처럼 대기업들이 저질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줬다. 정부 자신이 비정규직을 늘려 온 주범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을 확대하고 기간제 사용 기한을 늘리려 한다.

따라서 정부에 양질의 국가부문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며 싸워야 한다. 국가는 청년들을 고용할 능력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주화 등으로 불안정해진 일자리를 원청이 책임지도록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며 싸우는 것은 더 광범한 청년과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는 초점을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들에게 감면해 준 법인세를 늘리고, 부유층에 과세함으로써 마련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감면해 준 법인세만 원상회복시켜도 매년 십조 원 가량의 재원이 마련된다.

한국은 공공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나라다. 한국 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출은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국가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도 이어져 있다. 즉,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서로 대중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안이다.



청년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 이간질에 속지 말아야

청년실업률이 IMF를 불러들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엉뚱한 원인과 대책을 내놓는다. 가장 흔한 것은 청년들이 '쓸데없이 눈만 높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청년실업 문제를 다른 노동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고령 정규직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설명과 달리, 높은 청년실업률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기 침체는 실업을 더욱 악화시킨다. 1990년대 5퍼센트대 안팎이던 청년실업률은 'IMF 위기'로 10퍼센트 이상으로 치솟았고, 2000년대 초중반에 7퍼센트대를 오르내리다가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 속에서 최근에 10퍼센트대까지 오른 것이다.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하에서 피할 수 없는 풍토병 같은 것이고, 실업과 빈곤을 대규모로 동반한다. 특히 청년들이 경기 침체로 더 큰 타격을 받는다. 기업들이 미숙련 청년 노동자를 추가 고용하기 보다는 숙련된 고령 노동자를 장시간 혹사시키는 게 더 돈을 아끼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실업에 대해 이런 잘못된 설명을 유포하고는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청년 고용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청년실업자와 정규직 노동자를 이간질한다. '귀족 노동자들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 '실업자들 때문에 재정 위기가 악화된다'며 말이다.

그러나 청년 고용과 장년 고용(정년연장)을 대립시키는 것은 근거가 없다. 여러 연구들을 보면, 중고령자 고용과 청년층 고용은 함께 증가하는 보완적 관계가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일본 등 해외의 연구들도 대동소이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청년과 노동자들이 체제를 비난하기보다 서로를 비난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청년들이 겪는 고통은 전체 노동계급에게 가해지는 공격의 일부이지, 그것과 동떨어진 게 아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다면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저질 일자리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와 복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연금 개혁 등에 반대하는 더 광범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년들의 운동은 더 큰 노동계급 운동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단결된 투쟁을 통해 좋은 공공부문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노동자와 청년 모두를 위한 진정한 대안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연결돼 있다

8월 31일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최우수(A등급)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에서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고 하위 대학과 최하위 대학(D·E등급)은 신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제재 수준이 더 강하다.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학령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사립대인 한국 대학들이 학생들의 비싼 등록금에 의존해 온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다. 정

원 감소가 곧바로 대학 운영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령 인구 감소의 진정한 해결책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인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비율을 대폭 끌어 올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평가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완전히 방기한 것이다.

황우여는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은 쪽나무로 만든 물통" 같아서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큰 틀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고 그 자리를 청년들에게 강요하기 위해 대학 진학률을 줄이고, 산업 수요에 맞게 교육을

재편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다. 그래서 하위권 대학을 퇴출시키는 동시에 '특성화' 사업을 통해 나머지 대학들은 더 기업의 수요에 종속시키려 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은 교육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청년 실업은 정부와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탓이지, 고등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탓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학 구조조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오히려 정부가 사립대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부실한 사학재단은 국공립화해야 한다.

신간 소개

2차 개정 증보판

세월호 참사,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승주, 박한술, 양효영, 이아혜 지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펴냄
3000원, 100쪽
구입 문의 : 010-5443-2395